

문제점 분석은 미흡하나
정책 방향 제시 내용이 제시하고,
다양한 교육정책 분야를 제시함
→ 주제로 정리
→ 제시방법

저출산·고령화 사회 대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안

I 추진배경

- 저출산과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구조조정*

통계 등
제시는 없으나
교육정책 방향의 개편 필요
가장 최근에는
○ *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 억제,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대학구조조정 등

-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사회 환경의 급변에 따라
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 시급

II 현황 및 문제점

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잠재적인 경제성장력 저하로 교육생태계의 전환이 불가피

- 최근 2년간 연속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를 기록했고 향후 신생아수의
지속적 감소가 예상*되며 이에 따른 각급 학교들의 '학생 감소'는
심각한 상황

* 향후 신생아 수 예측(단위: 만명): '20년: 29.2 / '50년: 24 / '67년: 21.2

- 학령인구 감소*로 인한 학생 수 급감으로 교사 선발규모와 사범대학
입학 정원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

* 학령인구(6-21세) 예측(단위: 만명): '20년: 782 / '30년: 608 / '50년: 507

지방대학 신입생 수 급감으로 인한 지방대학 생존의 문제는 지역 경제와 직결되어 지역 경제의 손실이 우려

-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
대학 간 격차* 더욱 커졌으며 지방대의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

*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현황('13→'18): 총 감축된 인원 481,249명 중
비수도권 감축 정원은 294,205명으로 전체 비율의 61%를 차지

- 지방대학의 생존 문제는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방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 필요

□ 평균수명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·직업교육 지원 체계 마련

-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연령의 취학률이 OECD 국가 평균*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짐
* 연령별 취학률(한국:OECD, %): 15~19세: 87:85 / 25~29세: 9:16 / 30~39세 2:7
-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짧아지는 직업주기를 대비한 지속적인 평생교육, 직업교육 지원 체계 마련 시급

III 개선방안

□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교육생태계의 전환

- 출생아 수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폐원 문제를 대비하여 국공립유치원 확충,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
-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속적인 확충과 보육·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
- 국·영·수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편과 학생별 학습 편차 해소를 위한 학습 시스템 도입, 이에 따른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마련
-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성/자기주도성, 협업능력, 문제해결능력 등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우수시스템* 공유 및 확대 시행
* OO교육청의 우수사례: AI를 활용한 에듀 테크 기반의 지원시스템 도입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
- 새로운 교과(과목) 과정 개편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방안 마련 및 교원 양성 자격 체계 개선

□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지방대학의 혁신 방안 마련과 지방대학-지자체-기업의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

-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기존 학과 통폐합, 융복합 학과 신설 및 단과대학 재구성 등을 통한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 사례 도입
- 대학-정부-산업체 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
 -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확대를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학-지자체 간 협력 방안 마련
 -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대학의 교육·연구 시설 및 인력 제공을 통해 적극적 기업 유치, 일자리 창출

□ 평균수명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평생·직업교육 지원 체계 구축

- 유관 부처와 협업을 통한 퇴직자 재교육, 경력단절 교육 지원 정책 등 통합적인 평생교육체계 마련
 -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여 정책 추진
- 짧아지는 직업 주기와 변화하는 미래의 산업구조에 대비하여 혁신적인 직업교육 지원 체계 마련
 - 캠퍼스 인프라 없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(K-MOOC 등) 활성화, 산업체 및 문제 해결형 현장 수업 확대

IV

향후일정

- 중장기 교육정책 총괄 추진단 구성: '20. 1.
- 분야별 추진 TF팀 구성·계획 수립: '20. 2.
-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: '20. 3.
- 분야별 시범 교육정책 시행: '20. 6.